

사회경제, 인구학적 요인과 이혼율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Rates and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al Factors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정현숙**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Professor : Chung, Hyun-Sook

<Abstract>

The study analyzes divorce rates in Korea and mak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of divorce rates. Based on the data from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 of the National Statistics Organization, trends for divorce rates change and the relations between divorce rates and macro environmental factors are analyzed. Macro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Korean War, Vietnam War, oil shock, IMF economic crisis and gross national income (GNI), whereas demographical factors include population structure, rates of female labor participation, and geographical location.

The principle characteristics of divorce rates are as follows: 1) the Crude divorce rates (CDR) and the number of divorced had been increased from 1970 to 2004, then the trend changed to a decrease; 2) the slope of the change were the highest during 1998 to 2004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The 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re as follows: 1) during the war there was a small increase of CDR for a short period of time; 2) the economic crisis of the nation tend to increase the CDR, while the IMF economic crisis had a strong impact on an increase of CDR because of the interaction effect among the population structure, women's sex role changes as well as the level of standard of living. The increase in CDR from 1990 to 2000 can be explained partly by the population of baby Boomers passing through their marriage and divorce process. The number of population residing in the rural area and the middle class households, and the mobility of population also had an impact on the divorce rates changes.

Th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need to develop new divorce statistics that are based on a marriage cohort or a birth cohort because family behavior is a mixture of personal, social and political responses, and because CDR is not an accurate measure of divorce rate since it was influenced by population structure; 2) the need to include micro personal factors as well as macro social factors in a model to find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ose variables.

▲주요어(Key Words) : 이혼율(divorce rate), 사회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factors), 인구학적 요인(demographical factors),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 본 연구는 2007년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정현숙 (E mail : hschung@smu.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혼이란 결혼에 의한 부부관계가 협의나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종결되어 두 사람이 각각 독신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 한 해 1만 건 수준에서 1980년 2만 건, 1996년에는 8만 건을 넘어섰다. 2006년에는 12만 5천 건으로 하루 평균 342쌍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결된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1970년 0.4에서 2006년 2.6에 이르면서(통계청, 2007), 이혼을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그에 따른 연구 대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국내의 이혼 관련 연구는 1990년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연구내용 면에서도 이혼의 동향(이태영, 1987)이나 법적 측면(이화숙, 1988) 등에 초점을 둔 서술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과정으로서의 이혼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이혼의 원인, 이혼 후 부부와 자녀들의 적응, 이혼대책에 관한 요구도 등에 초점을 둔 실증적 연구(예: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1993; 한국여성개발원, 1996)들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동안 문제시되고 간과되어온 이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이혼은 부부관계의 해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문제가 가족체계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혼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이혼의 원인(노명숙·김순옥, 2000; 성한기, 2003; 이강이·최혜영, 2005; 이무영·이소희, 2003; 최상진·김은미·차영란, 2006; 허미화, 2002; 한경혜 등, 2004)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법원자료에 의존했던 이전 연구(김숙자, 1998)와는 달리 통계자료와 언론보도내용 분석을 통한 이혼 원인 분석(이강이·최혜영, 2005; 최상진 등, 2006)과 함께 원가족경험(전영주·이성희, 2006) 등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을 포함한 이혼의 영향요인에 까지 연구가 확대되었다. 이혼 가족의 자녀(권영미, 2000; 김옥·이완정, 2001; 서지영, 2002; 오은순, 1998; 이훈구, 2004; 조경미·주혜주, 2003;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에도 연구가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혼 후 적응을 돕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혼 이후의 적응과정 및 적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오은순, 2001; 옥선화 등, 2004; 최민자, 2002; 유희정, 2005; 한경혜 등, 2004; 허미화, 2002, 2004)들이 이

루어지면서 이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증가하였다. 부부들의 이혼 후 적응에 대한 관심은 이혼 후 노부모의 지원(박현주·한경혜, 2006), 이혼 후 개인적, 대인관계지원(옥선화·권소영, 2005), 결혼 전 부부관계의 특성(한경혜·손정연, 2006) 등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을 찾는 연구로 연구내용이 다양화 되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일반인들(김성희, 2003; 한경혜·이정화, 2002)과 이혼자와 자녀들의 인식(옥선화 등, 2006; 유희정, 2005)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인구집단의 이혼시각도 검토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우리나라 이혼제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이혼제도의 특성, 변화 및 제도개선 방안(구연창, 2002; 김철자, 1998; 방혜신, 2003, 2005; 이종한·이윤희, 2000; 한복룡, 2005)이 분석되었다. 이들 제도관련 연구들은 협의이혼제도(이정향, 2003)나 이혼숙려제도(구계군, 2006; 유계성, 2004), 연금분할제도(이정우, 2003), 세법(박훈, 2004), 친권(김상용, 1997), 이혼전 부부상당제도나 상담모델(유계숙 등, 2006; 유계숙·최성일, 2005), 자녀의 권리(정현숙, 2004) 등 다양한 이혼관련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 중국, 스웨덴,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이혼 실태 및 제도에 대한 분석(배정 등, 1998; 소천부지, 2000; 유희정, 2005; 표계학, 1994)도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이혼의 원인과 적응, 제도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의 이혼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이혼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이 축적되었으나, 이들 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발견된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이혼관련 연구들이 양적으로 급증하였으나, 이혼을 위기로 진단하게 된 이혼율 자체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혼율에 대한 연구의 수적 부족뿐만 아니라, 이혼율이 단기적인 통계지표와 조이혼율 등 인구구조에 민감한 인구지표 중심으로 분석되면서 이혼율 정도를 해석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혼율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이다. 조이혼율은 통상적으로 1년 동안에 발생한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총인구로 나누어 1,000을 곱하여 산출한 이혼 발생건수이다. 산출방법이 간편하고 단일지표로 이용이 수월한 반면, 현실 상황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간, 지역간 비교 해석에 주의가 요망되는 지표이다(정현숙, 2006). 그러나 대중매체와 학술논문에서조차 조이혼율을 국가간 비교하여 우리나라 이혼율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정은·김진석(2004)은 조이혼율을 기초로 “세계 2위의 이혼율, 놀라움 그이상의 힘겨움”이라고 이혼율 증가를 비판한다. 이혼율과 출산율 등 가족위기 지표를 분석한 송다영(2004)은 이혼율 증가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적응관점으로 설명하면서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조이

이혼율만을 기초로 이혼율을 분석하였다. 한성현 등(2000)의 연구에서는 인구동태자료 중 여성의 연령별 이혼율을 기초로 이혼확률을 산출하고, 1996년의 경우 20세 이상 유배우 여성의 이혼확률을 28%로 계산함으로써 이혼율에 대한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도 이혼율의 변화를 인구구조와 연결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혼율에 대한 분석은 이혼율의 종단적인 변화 특성을 인구구조와 연령구조를 기초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 상황에 맞는 이혼율 산출 방식도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이혼율의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IMF 위기와 같은 경제적 조건이나, 전쟁, 지역적인 차이 등 거시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지 않았으며 방법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혼 원인을 분석한 대부분 연구들은 가족의 내적과정, 즉 원가족의 건강성과 폭력성(전영주·이성희, 2006), 개인과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가용자원(이무영·이소희, 2003)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노명숙·김순옥, 2000; 신순자, 1999)은 재판상이혼 사유인 민법 840조 각호를 중심으로 이혼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들 연구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이혼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이혼에서의 가족원들의 내적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결혼은 경제적, 정서적 행위이며 또한 정치적 행위(Waite & Gallagher, 2000)이므로, 개인의 행동으로서의 결혼생활은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고 또한 사회변화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시적 지표들의 이혼율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일부 연구가 거시적 지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박경애(2000)는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이혼율의 변화를 성, 연령, 교육수준 등 개인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혼율의 개인 차이뿐만 아니라 이혼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혼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가를 분석한 것으로 이러한 지역적 차이의 원인과 각 지역의 전체인구 대비 이혼자의 비율을 분석하지 않아 지역적 차이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정기원(2004)도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여성의 취업률, 실업률, 성비, 두 번의 호적법 개정의 영향 등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이혼율 감소추세로 전환된 부분은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직선적 변화패턴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적 관계를 가정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혼율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사회역사적 특성 등 거시적 지표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저출산, 고령화 및 그로인한 인구감소가 일어난 시기를 1차 인구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이혼, 동거, 혼외출산 및 한부모가족

의 증가가 특징인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2차 인구학적 혁명시기로 명명한다(Giddens, 1999; Glenn, 2002; Hay, 1996; Skolnick, 1991). 이러한 인구혁명에 의한 영향으로 20세기 초 다양한 거시적 환경변화와 이혼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1, 2차 세계대전 등 사회적 변화와 지리적인 영향, 대공황 등의 경제적 혼란, 여성운동 등 사회, 문화, 인구, 경제학적 요인들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심리적 요인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Clark-Stewart & Brentano, 2006).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이 두 가지 인구혁명이 그 변화에 적응하거나 준비할 시간도 없이 혁명적으로 한꺼번에 다가오면서,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서구 연구결과를 이론적 기초로 하여 개인적응과 관련된 심리학적 변인 탐색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거시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쟁과 같이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이혼율 증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과 세계 1, 2차 대전 및 한국전, 베트남 전쟁이후 이혼율 급등을 지적한다. 급등의 원인은 전쟁기간 동안 구애기간이 짧고, 긴 이별기간과 타인을 만날 기회가 증가(Clark-Stewart & Brentano, 2006; Price & McKenry, 1988)하기 때문이다. 또한 애국심 때문에 전쟁기간 동안 기피했던 이혼이 전쟁 후에 증가하는 것도 이혼율 증가의 이유이며, 전쟁이후 결혼생활의 재적응 어려움(Leslie, 1982)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Clark-Stewart와 Brentano(2006)는 2차 세계대전 후 급격하게 이혼이 증가하고, 전쟁기간 중 이혼율이 소강상태인 것은 두 사람의 관계의 질이나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Price와 McKenry(1988)는 2차 대전 이후의 이혼율 증가는 전쟁기간 중 남성들의 일을 여성이 대신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취업률의 증가로 인한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경제적 능력 획득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전쟁 후 잠시 이혼율이 상승했으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1950년대에는 이혼율이 급감한다. 이러한 이혼율 감소 현상에 대해 Cherlin(1983)은 195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고 수적으로도 증가한 중산층 홀벌이가족이 안정을 택한 때문이며, 또한 이들이 전쟁이후의 경제적 부흥과 함께 가정에 대한 애착(domesticity)이 지속된 결과로 분석한다.

경제적 조건도 이혼율에 영향을 미쳐 경제가 어려운 동안은 경제활동이 낮아 이혼율이 낮은 반면, 호황기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그 이유를 해석한다(Price & McKenry, 1988). 실제로 미국의 대공황 시절 이미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이혼율은 상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시기 동안 급속한 이혼

을 감소는 없고 잠시 소강상태였으며, 대공황 이후 급격히 이혼율이 상승하였다(Clark-Stewart & Brentano, 2006).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분석을 통해 정기원(2004)은 경제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하지만, 실업율이 증가하면 이혼율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지리적인 조건과 위치도 이혼율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적인 서부와 전통이 강한 남부는 이혼율 차이가 나는데, 특히 골드러시 당시 유동인구가 많던 캘리포니아의 이혼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았으며(Simmons, 1998),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캘리포니아주가 196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무결점이혼(no-fault divorce law)을 받아들이는 주가 되는 원동력이 된다(Clark-Stewart & Brentano, 2006). 또한 인디애나 주와 네바다 주와 같이 이혼에 대한 규제적은 지역으로 와서 이혼하는 철새이혼(migratory divorce)이 많아지면서 이혼율의 지역적 차이도 나타난다(Clark-Stewart & Brentano, 2006).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볼 때 이혼은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맥락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후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65~1973: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군대를 월남으로 파견한 시기를 기준으로 함)과, 오일쇼크와 경제적 부흥, IMF 경제위기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1980년 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성역할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거시적 지표들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율관련 기존 연구에 더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가족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이혼율 자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구조 변화와 전쟁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환경인 역사, 사회적 변화요소들과 이혼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화와 인구구조, 지리적 조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혼율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이혼율의 문제점도 함께 분석하여 정확한 이혼율 이해를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2007년 10월 현재 통계청의 통계시스템자료(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와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등을 이용한 2차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의 원자료가 제공되는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이혼율과 거시환경적 요인 및 인구통계자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이혼율산출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쟁(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과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한 근대화 등을 역사·사회적 상황으로, 오일쇼크, IMF 사태 등의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 그리고 년도별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경제적 지표로 설정하였다. 인구

학적 특징은 인구구조, 여성의 취업률, 지리적 차이(도시화와 인구이동률) 등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논문 결과는 우리나라 이혼율의 미래 동향과 가족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올바른 이혼율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현실적인 가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조이혼율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역사적 상황과 이혼율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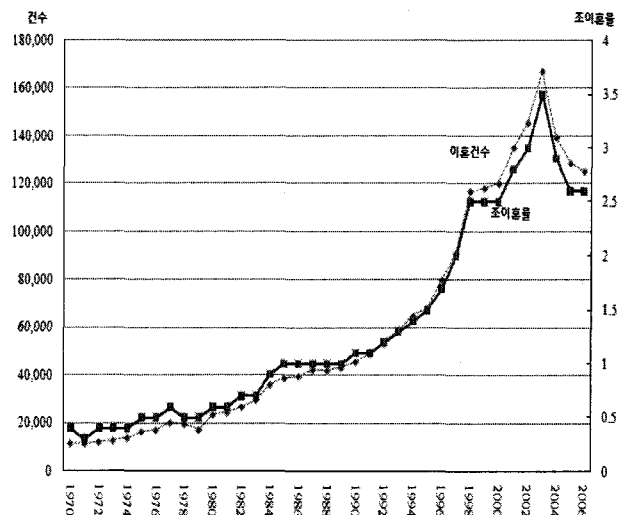
<연구문제 3> 인구학적 요소와 이혼율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본 론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원자료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비율과 퍼센트를 계산하였으며, 변화양상 파악을 위해 꺾은선 그래프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시간에 따른 이혼율 변화는 SAS 9.1을 이용하여 단순회귀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이혼율의 전반적 특징과 사회역사적 상황과의 관계, 인구학적요소와의 관계의 순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이혼율의 전반적인 특성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통계청, 각년도)에서 조이혼율과 이혼건수에 대한 통계가 함께 제공되는 시기는 1970년대 이후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과 이혼건수는 <그림 1>과 같다.



*자료: 통계청 시계열자료로 분석

<그림 1>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조이혼율의 변화추이

<표 1>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혼건수, 조이혼율, 증감율*과 GNI

(US \$)

년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이혼건수	11,615	11,361	12,188	12,719	14,073	16,453	17,178
이혼건수증감	0.4	-254	+827	+531	+1,354	+2,380	+725
조이혼율		0.3	0.4	0.4	0.4	0.5	0.5
조이혼율증감		-0.1	+0.1	0	0	+0.1	0
GNI**				394	540	592	799
년 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이혼건수	20,280	19,734	17,178	23,662	24,543	26,898	29,609
이혼건수증감	+3,102	-546	-2,556	+6,484	+881	+2,355	+2,711
조이혼율	0.6	0.5	0.5	0.6	0.6	0.7	0.7
조이혼율증감	+0.1	-0.1	0	+0.1	0	+0.1	+0.1
GNI**	1,009	1,399	1,636	1,598	1,800	1,893	2,076
년 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이혼건수	36,127	38,838	39,744	42,375	42,116	43,283	45,694
이혼건수증감	+6,518	+2,711	+906	+2,631	-259	+1,167	+2,411
조이혼율	0.9	1	1	1	1	1	1.1
조이혼율증감	+0.2	+0.1	0	0	0	0	+0.1
GNI**	2,257	2,309	2,643	3,321	4,435	5,418	6,147
년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이혼건수	49,205	53,539	59,313	65,015	68,279	79,895	91,159
이혼건수증감	+3,511	+4,334	+5,774	+5,702	+3,264	+11,616	+11,264
조이혼율	1.1	1.2	1.3	1.4	1.5	1.7	2
조이혼율증감	0	+0.1	+0.1	+0.1	+0.1	+0.2	+0.3
GNI**	7,105	7,525	8,177	9,459	11,432	12,197	11,176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이혼건수	116,727	118,014	119,982	135,014	145,324	167,096	139,365
이혼건수증감	+25,568	+1,287	+1,968	+15,032	+1,031	+21,772	-27,731
조이혼율	2.5	2.5	2.5	2.8	3	3.5	2.9
조이혼율증감	+0.5	0	0	+0.3	+0.2	+0.5	-0.6
GNI**	7,355	9,438	10,841	10,160	11,499	12,720	14,193
년 도	2005	2006					
이혼건수	128,468	125,032					
이혼건수증감	-10,897	-3,436					
조이혼율	2.6	2.6					
조이혼율증감	-0.3	0					
GNI**	16,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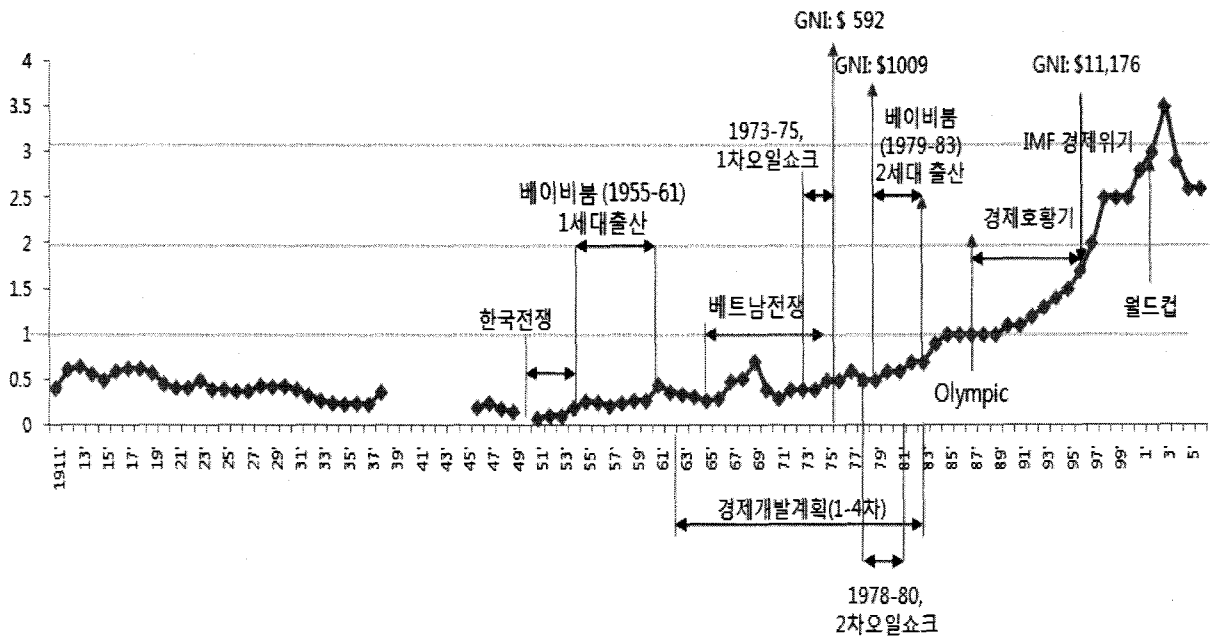
* 통계청 시계열자료에서 재분석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2006년 9월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1970년부터 약 15년 이상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던 이혼율은 1980년 10년 만에 두 배 증가하였으며, 1990년부터 1997년까지 7년간 이전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 폭발적 증가를 보인 조이혼율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1990년대 말의 높은 수준의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다(<표 1> 참조).

각 시기별로 증가폭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각 시기별 방정식은 Y₁~Y₅와 같다. 조이혼율의 증가 패턴이 직선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아 급간을 나눠 분석하

였다. 각 방정식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1970년대 이후 10년간 기울기(수식 1)는 .11로 이후 10년간의 기울기(수식 2) .05보다 가파르며, IMF이후인 1998년부터 2004년 6년간의 증가폭이 .19로 가장 크고, 이후 다시 급격한 속도의 감소를 보인다.

$$\begin{aligned}
 Y_1 &= .11 \times \text{년도} - 214.34 \quad (\text{년도: } 1970 \sim 1980\text{년}) \quad \dots \text{수식 } 1 \\
 Y_2 &= .05 \times \text{년도} - 106.19 \quad (\text{년도: } 1980 \sim 1990\text{년}) \quad \dots \text{수식 } 2 \\
 Y_3 &= .12 \times \text{년도} - 243.03 \quad (\text{년도: } 1990 \sim 1998\text{년}) \quad \dots \text{수식 } 3 \\
 Y_4 &= .19 \times \text{년도} - 385.87 \quad (\text{년도: } 1998 \sim 2004\text{년}) \quad \dots \text{수식 } 4 \\
 Y_5 &= -.15 \times \text{년도} + 303.55 \quad (\text{년도: } 2004 \sim 2006\text{년}) \quad \dots \text{수식 } 5
 \end{aligned}$$



<그림 2> 우리나라 조이혼율과 1950년대 이후 중요한 역사, 사회, 인구학적 요인

2006년 현재 이혼건수는 12만 5천여 건으로 1970년을 기준으로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조이혼율은 2.6이다. 주요 국가들의 조이혼율은 미국 3.8(2003), 일본 2.1(2004), 독일 2.6(2004), 러시아 4.4(2004)이다.

2. 이혼율과 역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과 1950년대 이후 중요한 역사,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1970년대 이전은 이혼건수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전반적인 이혼율의 변화 추이는 조이혼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그림 1>에서 1970년 이후 조이혼율과 이혼건수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므로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 주제영역별로는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1) 전쟁과 조이혼율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1950~1953)과 베트남전쟁(1964~1975)을 경험하였다. 베트남전은 1959년 시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베트남에 개입하면서 시작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기준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국군파일이 이시기 이후 미국의 요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75년까지 계속된 이 전쟁에 한국군은 4만5천 명을 유지하기 위해 8년여 동안 32만 명의 교체 병력을 투입하였으며,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만9천여 명의 한국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에 일부 자료의 유실로 전체 자료가 제공되지 않지만,

한국전쟁 후 이혼율이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파병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1966년부터 1971년까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 일시적인 조이혼율 상승이 나타난다.

2) 국가의 경제적 상황

국가의 경제적 상황은 오일쇼크나 IMF와 같은 일시적, 장기적 경제적 위기와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과 같은 경제지표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및 GNI지표는 <표 1>과 같다.

(1) 경제적 위기 상황

우리나라의 오일쇼크는 2차례로 1973년 중동전쟁이 발발 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1973~1974년, 1978~1980년 석유생산을 제한하고, 가격을 상승시킴으로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다. 1974년과 1975년 제1차 석유파동 시 경제성장률은 각각 8.0%와 7.1%로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제2차 석유파동인 1979년과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5.7%로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 IMF경제위기는 이전의 오일쇼크보다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의 실직 등 가족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그림 2>와 <표 1>에서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IMF외환위기(1997)와 같은 일시적 경제적 위기 동안은 조이혼율의 증가속도가 주춤하거나 일시적인 감소 경향을 보인다.

1973년을 기준으로 1977년까지 증가하던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1978년 일시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오일쇼크가 일어난 후 1975년은 1974년보다 2,380명이 더 이혼을 하였으나 1976년은 전년도보다 725명만이 이혼하여 증가율이 일시 주춤했으나, 1976년에서 1997년은 다시 3천명이 넘는 이혼자수 증가를 보이며, 다시 발생한 오일쇼크와 경제적 위기는 1979년의 일시적 이혼건수 감소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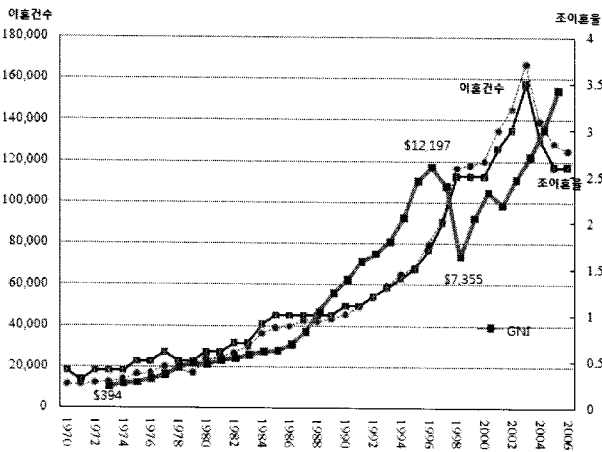
IMF 경제위기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혼율이 1999년과 2000년 일시적으로 증가속도가 주춤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앞의 수식 4에서와 같이 1998년부터 2004년 동안은 가장 빠르게 이혼율이 증가하여 IMF의 영향이 장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짧은 기간은 조이혼율과 이혼

건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일시적인 하락을 보이지만,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2) 1인당 국민소득

명목국민총소득은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총소득을 의미하므로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취득소득을 더하여 산출한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 환율적용)로 표시한다. <표 1>의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GNI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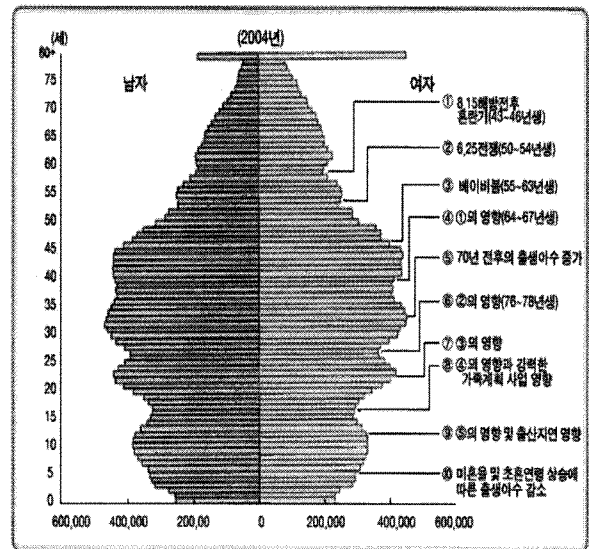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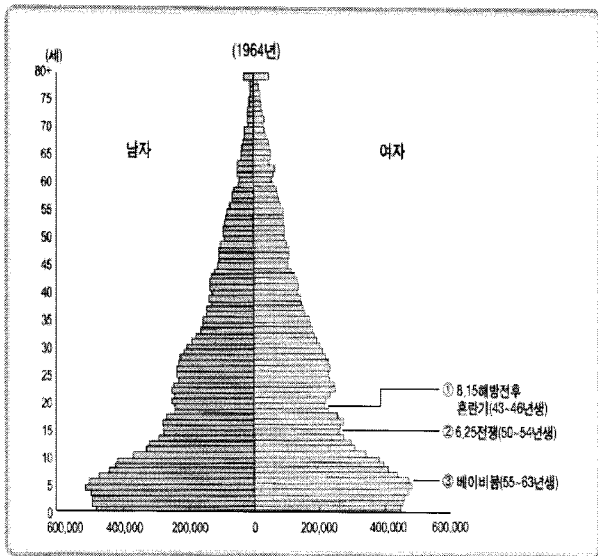
<그림 3>에서 1970년 이후 1996년까지 GNI와 조이혼율의 증가속도는 차이가 있으나 두 곡선은 비슷한 패턴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IMF이후 급속한 국민소득의 감소 후에도 이혼율은 급증하고, 2004년 이전수준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이혼율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사유별 구성비(<표 2> 참조) 자료로도 입증된다. 1970년부터 2006년까지 통계청 자료의 범주는 차이가 있으나, 1970년부터 1999년까지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구성비는 1980년 중후반부터 IMF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비율이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2000년 이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자료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통계청(2007), 통계청 시계열자료

<그림 3> 조이혼율과 GNI 변화(1970-2006)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07)

<그림 4> 2004년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

<표 2> 이혼사유별 구성비(1970~2006년)

년도	부부간 불화*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건강문제	기타
1970	64.6	8.3	5.0	5.7	16.4
1971	64.6	8.3	5.4	6.1	15.6
1972	64.8	8.2	5.6	5.8	15.7
1973	63.4	8.2	5.5	5.8	17.1
1974	63.5	8.3	5.0	5.7	17.5
1975	64.1	8.5	5.2	5.2	16.9
1976	65.7	7.2	4.8	5.0	17.2
1977	67.9	6.8	4.4	4.6	16.3
1978	72.2	5.9	3.6	4.2	14.2
1979	73.0	5.5	3.5	3.8	14.1
1980	74.4	5.3	3.6	3.3	13.4
1981	75.6	5.4	3.9	2.6	12.5
1982	77.2	4.5	3.7	2.5	12.1
1983	78.2	4.5	3.5	2.2	11.6
1984	79.5	4.0	3.3	1.8	11.5
1985	80.6	4.2	3.0	1.6	10.6
1986	80.2	4.1	2.9	1.6	11.2
1987	79.9	3.3	2.6	1.7	12.4
1988	81.6	3.6	2.3	1.5	11.1
1989	81.9	3.4	2.2	1.5	11.0

년도	부부간 불화				경제문제	건강문제	기타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성격 차이	가족간 불화			
1990		84.9			2.0	1.5	11.6
1991		85.2			2.0	1.4	11.4
1992		86.2			1.9	1.4	10.5
1993		84.8			2.3	1.1	11.8
1994		83.1			2.8	1.1	13.0
1995		83.1			3.0	0.9	13.0
1996		83.3			3.5	1.0	12.2
1997		82.4			4.2	1.0	12.4
1998		80.6			6.6	1.0	11.8
1999		80.1			7.1	0.9	11.9
2000	8.1	4.3	40.1	21.9	10.7	0.9	14.0
2001	8.7	4.7	43.0	17.6	11.6	0.7	13.7
2002	8.6	4.8	44.7	14.4	13.6	0.6	13.3
2003	7.4	4.3	45.3	13.0	16.4	0.6	13.1
2004	7.0	4.2	49.4	10.0	14.7	0.6	14.1
2005	7.6	4.4	49.2	9.5	14.9	0.6	13.8
2006	7.6	4.5	49.7	8.9	14.6	0.8	13.9

* 2000년 이후 '부부간 불화' 항목이 배우자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성격차이로 세분화됨

** 1990-1999 가족간 불화가 부부간 불화에 포함+자료: 통계청(각년도), 혼인과 이혼결과

3. 이혼율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

1) 인구구조의 영향

1980년대까지 1이하로 유지되던 조이혼율이 1990년을 기점으로 2000년까지 10년 동안 2배의 증가율을 보인다(<표 1> 참조). 이러한 조이혼율의 증가 원인은 조이혼율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그림 4>의 인구피라미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으로 혼인과 이혼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1세대는 1955~1963년생들로 규정되는데 이전 세대인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동안의 출생자보다 180여만 명이 많은 숫자이며, 전쟁 발발전보다 10% 높아진 숫자로서 전쟁기간 대비 25%의 출생률 증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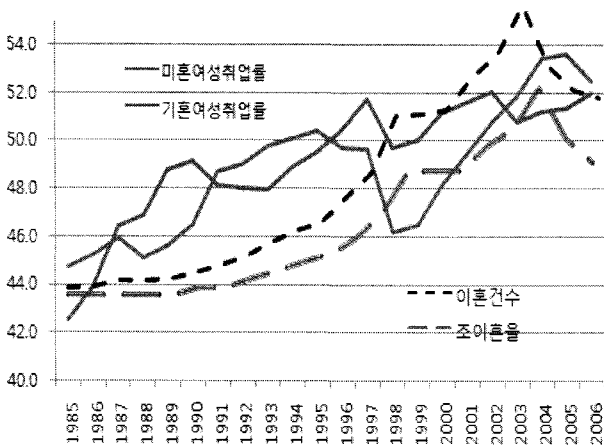
따라서 <그림 4>의 1964년 인구피라미드에서와 같이 1964년에 연령이 2~9세이던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은 1990년에 27~35세가 되고, 1990년의 평균 초혼연령(남 27.8세, 여 24.8세)과 1991년 평균이혼연령(남, 37.2세, 여 33.1세)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결혼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즉 베이비붐세대의 많은 인구들이 혼인과 이혼과정에 포함되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혼율 상승을 유도 한 것으로 인구구조 자체가 조이혼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이시기는 또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조이혼율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기 시작한다.

또한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조혼인율의 패턴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다.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2세대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령은 17세에서 21세이며, 2005년의 평균혼인연령(남 30.9세, 여 27.7세)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혼인을 시작하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혼인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계속 감소하던 조혼인율이 2003년 6.3을 기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4, 6.5, 6.8로 증가하는 패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인구 1,000명당 이혼한 사람의 수나 혼인한 사람의 수로 계산되는 조이혼율과 조혼인율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 붐 2세대들이 이혼 평균기간에 도달하는 2010년 이후 또 한 번의 이혼율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감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2) 여성의 취업률: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

여성의 성역할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조이혼율과 취업률통계가 함께 가능한 1985년 이후 약 20년간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률과 조이혼율의 관계는 <그림 5>와 같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취업률은 IMF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07)에서 정리

<그림 5> 조이혼율과 미혼, 기혼여성의 취업률(1985~2006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7년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이혼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매우 다양한 패턴으로 증감을 보이며, 조이혼율과는 직접적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3) 지리적 차이

우리나라는 전국이 동일한 호적법이 적용되므로 지역적 차이는 편의상 행정구역별 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별 이혼관련 자료는 1990년 이후의 조이혼율과 이혼건수이다.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의 26년간의 변화 양상은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에서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이혼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그림 7>의 조이혼율은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기도의 순서이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두 통계치로 행정구역간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구역별 이혼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 인구총조사 자료인 2005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인구급간별 인구수, 평균연령, 각 급간별 인구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 자료는 <표 3>과 같다. 그러나 2005년을 기준으로 12만 5천 건의 이혼건수 중 19세미만 이혼자는 없으며 20~24세는 1,400 건이다. 반면 25~54세 남성은 11만 5천 건으로 89.4%이다. 24세 미만의 경우 여성은 4,700건(3.8%)이며, 25~54세는 11만 7천 건으로 91.1%에 달한다. 따라서 노동인구에 포함되는 15세에서 24세까지 연령을 포함 할 때 이혼율은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25~54세 인구급간을 계산하여 이혼율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별 이혼율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도시화율 대신에 15세 이상 농촌인구를 <표 3>에 포함하였다. 이혼율 예측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근대화

지표인 도시화율이다. 도시화율은 인구 100명당 도시지역 거주자수로 1970년 40.7%에서 2000년 81.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시화율이 시도별로 제공되지 않아 대안으로 지역의 15세 이상 농촌인구를 포함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2005년 이혼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조이혼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3.3)와 제주도(3.0)다. 그러나 15~64세 연령대비 이혼자 비율은 인천이 .47%, 제주도가 .46%로 인천이 높지만, 25~54세 인구 중 이혼한 사람의 비는 인천광역시가 .68%이며, 제주도는 .69%로 제주도가 조금 높다. 따라서 조이혼율만으로는 지역의 이혼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못한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15세 미만 연령 비율은 제주도보다 적으며, 총인구에서 25~54세 비율은 인천광역시가 51%이며 제주도는 45%이다. 즉, 조이혼율은 인천광역시가 조금 높지만 실제 연령대비 이혼율은 제주도가 훨씬 높다. 또한 2.7로 같은 조이혼율을 보이는 부산과 강원도를 비교해 보면, 부산광역시가 15~64세 뿐만 아니라 25~54세 인구의 비율도 훨씬 높아 강원도가 부산광역시 보다 실제인구의 이혼비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이혼율이 아니라 인구구조를 고려한 이혼건수의 비율로 이혼율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하면, 조이혼율은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기도의 순서였으나, 이혼이 많은 연령(25~54세) 대비 이혼건수 비율은 제주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북도의 순으로 높아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를 통제 한 이혼율이 높다. 또한 15세 이상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도시화율을 유추해 볼 때, 25~54세 인구 중 이혼한 사람의 비율은 광역시보다는 강원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농가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의 비율이 높다. 같은 충청도지역에서도 농촌인구비율이 높은 충청남도가 인구대비 이혼율은 높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산층 밀집지역이 분포한 광주, 대전광역시 등의 이혼비율이 낮다. 또한 경상북도도 이혼율이 낮은데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이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3대 도시, 서울특별시(.0050), 부산광역시(.0058), 대구광역시(.0049)의 25~54세 인구대비 이혼율을 비교하면, 대구광역시의 이혼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낮은 것에서도 입증된다.

이러한 논의는 행정구역별 인구동태인 <표 4>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전출입인구 비율로 인구가동성을 볼 때, 대구광역시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와 비교하여 시도 간 전입율이 낮고 시도내 이동성이 높아, 지역색과 전통적인 의식이 더 보존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특색이 이지역의 보수적인 특성을 보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3> 2005년 행정구역별, 연령별 인구, 평균연령,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총인구(A)	15세 미만	15~64세	25~54세	65세 이상	이혼		평균 연령	성비	조이 혼율	15세 이상
		(B)	(C)	(D)	(E)	건수(F)					농가인구
		(B/A)	(C/A)	(D/A)	(E/A)	(F/C)	(F/D)				(G/A)
전 국	47,041,434	8,986,128 (.191)	33,690,088 (.716)	22,760,151 (.483)	4,365,218 (.092)	128,468 .0038 .0056		35.6	99.53	2.6	3,098,488 (.006)
서울특별시	9,762,546	1,619,296 (.165)	7,432,406 (.761)	5,021,603 (.514)	710,844 (.073)	25,300 .0034 .0050		35.5	98.21	2.5	10,666 (.001)
부산광역시	3,512,547	581,853 (.165)	2,626,758 (.748)	1,714,694 (.488)	303,936 (.086)	9,905 .0038 .0058		36.7	97.7	2.7	24,758 (.007)
대구광역시	2,456,016	466,750 (.190)	1,792,744 (.730)	1,198,832 (.488)	196,522 (.086)	5,916 .0033 .0049		35.2	99.86	2.3	47,899 (.020)
인천광역시	2,517,680	510,197 (.202)	1,828,755 (.726)	1,271,449 (.505)	178,728 (.070)	8,646 .0047 .0068		34.2	100.6	3.3	33,485 (.013)
광주광역시	1,413,644	303,596 (.214)	1,008,868 (.714)	664,832 (.470)	101,180 (.071)	3,127 .0031 .0047		33.3	98.4	2.2	39,257 (.028)
대전광역시	1,438,551	291,512 (.202)	1,046,134 (.727)	701,744 (.487)	100,905 (.070)	3,328 .0032 .0047		33.8	100.41	2.3	25,122 (.017)
울산광역시	1,044,934	231,322 (.221)	757,763 (.725)	541,683 (.518)	55,849 (.053)	2,780 .0037 .0051		33.2	106.14	2.6	39,247 (.038)
경기도	10,341,006	2,225,010 (.215)	7,363,393 (.712)	5,224,083 (.505)	752,603 (.073)	30,358 .0041 .0058		33.8	100.84	2.9	403,890 (.039)
강원도	1,460,770	267,048 (.183)	1,005,728 (.688)	658,780 (.450)	187,994 (.129)	4,105 .0041 .0062		37.8	100.79	2.7	190,929 (.131)
충청북도	1,453,872	278,969 (.191)	999,323 (.687)	657,591 (.453)	175,580 (.120)	3,469 .0034 .0053		36.7	100.87	2.3	214,604 (.148)
충청남도	1,879,417	348,332 (.185)	1,263,286 (.672)	810,155 (.431)	267,799 (.142)	4,594 .0036 .0057		37.8	101.25	2.3	403,340 (.215)
전라북도	1,778,879	338,542 (.190)	1,187,452 (.667)	749,077 (.421)	252,885 (.142)	4,471 .0038 .0060		38.0	96.73	2.4	287,727 (.162)
전라남도	1,815,174	338,800 (.186)	1,155,624 (.636)	729,296 (.401)	320,750 (.176)	4,394 .0038 .0060		40.1	96.16	2.2	434,143 (.239)
경상북도	2,594,719	459,153 (.176)	1,761,146 (.678)	1,138,51 (.438)	374,420 (.144)	5,828 .0033 .0051		38.5	99.28	2.2	500,444 (.193)
경상남도	3,040,993	609,457 (.200)	2,101,716 (.691)	1,437,065 (.472)	329,820 (.108)	7,844 .0037 .0055		36.3	100.08	2.5	357,697 (.118)
제주도	530,686	116,291 (.219)	358,992 (.676)	240,816 (.453)	55,403 (.104)	1,663 .0046 .0069		35.3	98.78	3	92,386 (.174)

*통계청의 2005년 인구통계연보 자료를 재정리하고 비율을 계산함

<표 4> 2005년 행정구역별 인구동태 현황과 비율

	총인구(A)	총진입(B)	총진출(C)	시도내이동- 시군구내 (D)	시도내이동-시 도구간 전입	시도내이동- 시도구간 전출	시도간 전입 (E)	시도간 전출
		(B/A)	(C/A)	(D/A)			(E/A)	
전 국	47,041,434	8,795,397 (.1870)	8,795,397 (.1870)	3,279,032	2,701,086	2,701,086	2,815,279	2,815,279
서울특별시	9,762,546	1,990,749 (.2039)	2,041,756 (.2091)	628,013 (.0643)	769,700	769,700	593,036 (.0607)	644,043
부산광역시	3,512,547	68,186 (.0194)	73,290 (.0209)	20,213 (.0058)	30,727	30,727	17,246 (.0049)	22,350
대구광역시	2,456,016	440,350 (.1793)	65,300 (.1895)	164,180 (.0668)	173,277	173,277	102,893 (.0419)	127,843
인천광역시	2,517,680	502,168 (.1995)	491,203 (.1951)	166,861 (.0663)	167,263	167,263	168,044 (.0667)	157,079
광주광역시	1,413,644	290,429 (.2054)	297,762 (.2106)	99,108	103,774	103,774	87,547 (.0619)	94,880
대전광역시	1,438,551	287,835 (.2001)	284,625 (.1979)	86,448	103,121	103,121	98,266 (.0683)	95,056
울산광역시	1,044,934	169,68 (.0162)	170,073 (.1628)	61,880	56,286	56,286	51,515 (.0493)	51,907
경기도	10,341,006	2,197,321 (.2125)	2,028,470 (.1962)	839,637 (.0812)	587,523	587,523	770,161 (.0745)	601,310
강원도	1,460,770	245,689 (.1682)	257,162 (.1760)	118,571	46,506	46,506	80,612	92,085
충청북도	1,453,872	235,907 (.1623)	240,615 (.1655)	113,771	43,610	43,610	78,526	83,234
충청남도	1,879,417	325,444 (.1732)	320,445 (.1705)	124,554	53,973	53,973	146,917	141,918
전라북도	1,778,879	311,537 (.1751)	336,014 (.1889)	158,000	79,072	79,072	74,465	98,942
전라남도	1,815,174	284,412 (.1567)	304,419 (.1677)	118,730	55,744	55,744	109,938	129,945
경상북도	2,594,719	374,711 (.1444)	386,228 (.1489)	164,429	63,390	63,390	146,892	158,409
경상남도	3,040,993	493,352 (.1622)	487,733 (.1604)	209,952	129,855	129,855	153,545	147,926
제주도	530,686	93,041 (.1753)	93,846 (.1768)	42,286	28,596	28,596	22,159	22,964

*자료: KOSIS 자료에서 비율을 계산함

III. 결론과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 환경적 지표와 이혼율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혼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족복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70년부터 2006년까지 통계청의 KOSIS와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혼율과 경제구조의 변화와 전쟁 등을 포함하는 역사, 사회적 변화요소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지리적 조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조이혼율의 문제점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과 이혼건수의 경향은 전반적인 증가추세에서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IMF 이후인 1998년부터 2004년 6년간 조이혼율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둘째, 사회·역사적인 상황과 이혼율의 관계는 역사적상황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후 일시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남북전쟁과 세계 1, 2차 대전 및 한국전, 베트남 전쟁이후 이혼율 급등과 비슷한 패턴이지만, 그 영향력은 미국의 경우만큼 크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의 영향이 장기적이고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보다 사망자나 파병인원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파월이 이루어졌던 1967년 이후 일시적인 급등은 Clark-Stewart와 Brentano(2006)이 주장한 것과 같이 전쟁기간 동안의 짧은 구애나 전쟁기간 중의 생존문제, Price와 McKenry(1988)의 주장처럼 여성들의 취업률의 증가로 인한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경제적 능력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이혼율과의 관계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석의 일반화를 보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통계청이 1948년 공보처 통계국으로 신설되었으나 신설 직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의 자료는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현대적 의미의 호적제도로 정착되기 전이므로 이혼율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오일쇼크와 IMF 경제위기와 국민소득도 이혼율 상승과 관련이 있으나 그 영향력에서는 두 사건 간에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위기 상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가 일어난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일쇼크가 일어난 1970년대 중반은 1960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3차까지 이루어진 시기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시기로 IMF가 일어난 1997년과

는 여성들의 성역할변화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비록 IMF 위기 이후 이혼율 증가세가 약 3년간 둔화되는 패턴은 보이지만 절대적인 이혼건수 및 비율은 1973~1980년은 조이혼율이 .4에서 .6으로 증가한 반면, 1997년부터 2003년간에는 2에서 3.5로 조이혼율이 1.5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앞의 수식 4에서도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의 경제적 호황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중진국에 진입하였으며, 여성의 고학력과 취업이 증가하면서 변화된 성역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IMF는 이전의 오일쇼크 때 보다 가장의 실업율이 높아 정기원(2004)이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하지만, 실업율이 증가하면 이혼율은 증가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제3차 오일쇼크를 경고한다. 뉴욕타임스는 제3차 오일쇼크는 1970·80년대의 1, 2차 때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동반한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오일쇼크가 중동 산유국들의 일방적인 저지 때문이었다면 제3차는 인도와 중국 등의 신흥국들의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꾸준한 가격상승에 기인하기 때문이다(서울경제, 2007. 11. 11). 따라서 경제적 위기가 이혼율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실업을 감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적인 면에서는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1인당 국민소득과 조이혼율은 비슷한 속도와 패턴으로 증가하지만, 1998년 급속한 국민소득의 감소 후 이혼율은 급증하며, 2004년 이전수준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이혼율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Price와 McKenry(1988)의 주장과 같이 호황기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공황 이후 이혼율이 잠시 소강상태였으나, 이후 이혼율이 상승한 것(Clark-Stewart & Brentano, 2006)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IMF이후의 이혼율 상승은 실업율이 증가하면 이혼율은 증가한다고 주장한 정기원(2004)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이혼율 감소 현상은 Cherlin(1983)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이전부터 수적으로 증가한 중산층 가족이 안전성을 선택하고, IMF 이후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중매체와 교육 등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인구학적 요인과 이혼율은 인구학적 지표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이혼율 증가는 베이비붐세대의 인구가 평균적인 이혼 연령에 도달한 것이 원인으로 인구구조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적인 조이혼율의 차이도 이혼이 많은 연령(25~54세)의

비율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 지표로 선택한 1985년 이후의 “기혼여성취업률”과 이혼율과의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조정이혼율(이혼건수/15세 이상 유배우여성×1,000)과 사회경제상황과의 관계를 분석한 정기원(2004)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혼율에 영향을 보이지 않은 결과와 일치한다.

이혼율도 지리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조이혼율은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기도의 순서였으나, 이혼이 많은 연령(25~54세)의 인구구조를 고려한 지역별 이혼비율은 제주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북도의 순으로 높다. 또한 15세 이상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25~54세 인구 중 이혼한 사람의 비율은 강원도, 전라남북도 등 농가인구 비율이 높은 곳의 이혼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역의 농촌 인구비율, 중산층 밀집정도, 유교적 지역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단순한 이혼자수의 분포로 정책을 계획하기 보다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구조 대비 이혼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역에 맞는 차별적인 이혼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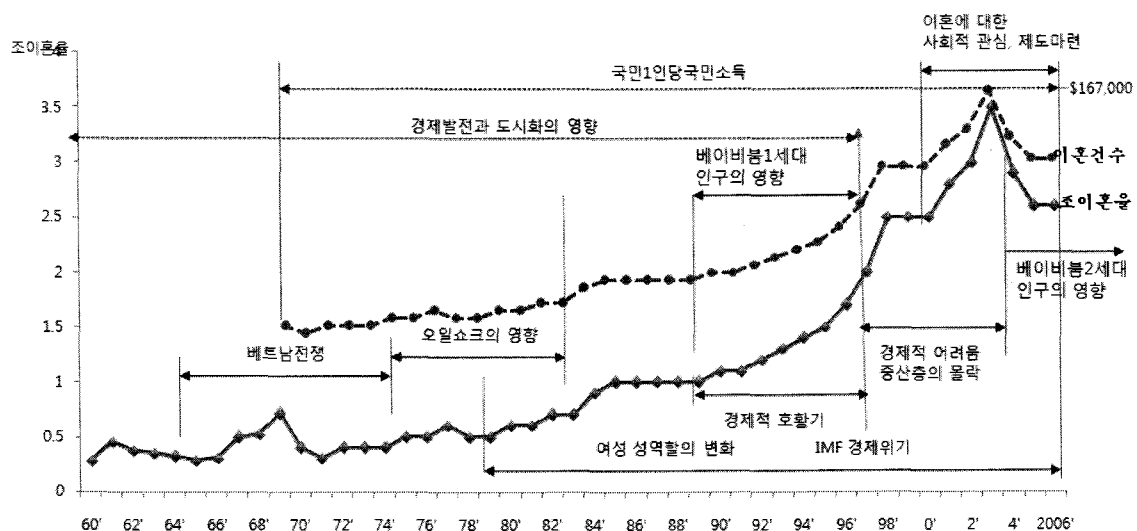
그러나 사회경제적, 역사적 요인과 인구학적요인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호적제도의 정비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자연증가와 상호작용하여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1, 2차의 오일쇼크와 IMF를 비교하면 경제적 위기이후의 이혼율의 증가 폭은 IMF 이후가 더 컸으며, 그 차이는 그 시대의 근대화 수준이나 여성들의 의식차이뿐만 아니라 가족이념의 차이들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 이후의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적 호황기와 베이비붐 세대 인구의 이동 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기물이기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Waite와 Gallagher(2000)가 결혼은 경제적, 정치적 행위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과 인구학적 요인 및 경제적 지표들과 이혼율 추이는 <그림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앞으로 이혼율은 베이비붐 2세대 인구가 혼인과 이혼과정에 포함됨으로써 다시 이혼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제3차 오일쇼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3차 쇼크는 이전시기와는 사회적 환경이나 여성의 의식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결혼에서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가 예측되어 이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2. 제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혼율과 이혼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 중 이혼율과 이혼법의 관련성은 살펴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1977년과 1990년에 호적법이 일부 수정되고, 2005년 이후 이혼수령제도로 시행되었으나, 1990년대 호적법 변화는 미국의 경우처럼 무책주의(No-fault divorce law)와 같은 제도자체의 혁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일부 조항의 변화만을 포함한 것이고, 이혼수령제도의 경우 그 영향력을 보기에는 아직 전국적인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그 효과를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977년, 1990년 법개정 이후 이혼법의 영향을 살펴본 정기원(2004)의 연구에



<그림 6> 이혼율과 거시 사회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요약)

서는 두 차례의 법개정이 조정이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이혼율과 이혼법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 50개주의 이혼율과 무책주의(no-fault divorce law)로의 법의 개정이후의 이혼율에 대한 분석에서 Ellman과 Lohr(1998)는 1960, 70년대의 문화적 변화로 이미 이혼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되었으며, 그 이후 가파르게 이혼율이 증가함으로써 이혼법 개정과 이혼율의 관련성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Clark-Stewart와 Brentano(2006)도 미국의 이혼역사를 볼 때 복잡한 사회, 문화, 인구, 경제학적 요인이 이혼법 개정의 결과가 아니라 이혼법 개정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이혼을 보는 사회적 시각의 차이와 법 자체의 차이를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이혼숙려제도와 이혼율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Ellman과 Lohr(1998)의 연구에서 이 두 변수간의 관련성은 비록 미약하지만, 이혼율 증가와 법의 개정은 같은 원인, 즉, 사회의 가치나 규범의 변화, 경제적 기회의 변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 및 대중매체에서의 모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제약조건으로서의 이혼법은 사람들의 가치에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거시환경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이혼율에 미치는 거시 환경적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심리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의 경우 1960년대의 여성운동의 영향이 1980년대까지의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한 가지 요인일 뿐이며 다른 많은 사회적 변화들이 여성의 행동변화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Thornton(1989)은 1962년과 1985년 같은 대상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을 할 것인가의 문항에 1962년에는 50%가, 1985년에는 25%만이 이혼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불행한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생애과정에서의 경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 2차의 오일쇼크와 IMF의 경제적 위기가 일어난 시기는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수준이 다르고, 여성의 의식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이혼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1985년 이후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조이혼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경우 1960년대 여성운동이후 여성의 취업률과 이혼율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현재 기혼여성 취업률과 이혼율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 1985년 이후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혼이라는 행동은 개인적인 변화와 사

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 변인들을 함께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두 번째 제언과 관련하여 이혼율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코호트, 출생코호트별 이혼율 산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조이혼율은 지역간, 국가간 비교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2007년부터 통계청은 2006년 이혼통계 결과(통계청, 2007)에 일반이혼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통계 역시 혼인연령에 포함되는 실제인구를 기준으로 한 이혼비율과는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일반이혼율은 총 이혼건수를 15세 이상 남(여)자 인구에 1,000을 곱한 수치로 계산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2006년 15~19세 연령에서 이혼한 남자는 한명도 없으며, 20~24세까지 이혼은 1,400건(1.12%)이기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 중 이혼비율인 일반이혼율 역시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별 이혼율이나 결혼코호트별 이혼율을 제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결혼코호트별 결혼기간에 따른 이혼율의 유용성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세대들의 이혼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결혼코호트별 이혼율은 이혼율 증감의 원인에 대한 현실적 설명을 가능케 해 준다. 예를 들어, 2006년을 기준으로 결혼기간 9년까지의 이혼율을 재분석함으로써 결혼코호트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는 결혼기간 10년 이상을 하나의 급간으로 묶어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각 기간별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을 계산할 수 없다. 자료의 한계로 결혼 후 9년까지의 결혼코호트별 이혼율을 계산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7년에 결혼한 결혼코호트 388,591명 중 9년간 이혼한 사람은 66,956명으로 전체의 17.2%가 이혼했으며, 2000년 결혼코호트 334,030명 중 결혼기간 5년 동안 2006년까지 이혼한 사람은 15.3%이다. 결혼코호트의 이혼율은 다음과 같다.

$$Y(\text{이혼율}) = X(\text{결혼기간}) + b \quad (\text{단, } 0 \leq X \leq 9)$$

단순회귀분석 결과 $Y = 1.76X + 3.25$ 이다. 즉, 결혼기간 10년 전까지는 결혼 1년 지날 때 마다 이혼할 확률이 1.76%씩 증가한다. 따라서 결혼 3년에는 9.1%, 5년에는 11.8%, 9년에는 17.2%로 증가한다. 기준년도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의 이혼율이 미국보다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미국질병관리 및 예방센터의 전국 15세에서 50세 결혼한 여성에 대한 종단연구(Bramlett & Mosher, 2002) 결과 결혼기간 3년에는 12%, 5년 20%, 10년 33%, 15년 후 43%가 이혼하여,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이혼율을 보인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인구구조에 영향을

<표 5> 1997년~2006년 결혼코호트별 결혼기간에 따른 이혼율

결혼년도→	2006 (기준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총혼인건수(A)→	332,752			316,375	310,944	304,932	306,573	320,063	334,030	362,673	375,616	388,591
이혼년도 ↓	총이혼 건수↓	결혼기 간↓	결혼기간별 각 년도 이혼건수 ↓									
2006	125,032	0	6,897	7,062	6,592	6,350	6,242	6,086	5,806	5,248	5,126	5,101
2005	128,468	1년	.	6,211	6,816	6,816	6,815	6,674	6,368	5,680	5,682	5,428
2004	139,365	2년	.	.	6,025	7,228	7,301	7,366	7,151	6,711	6,653	6,356
2003	167,096	3년	.	.	.	7,206	8,434	8,585	8,562	8,256	8,212	7,992
2002	145,324	4년	7,412	7,820	8,285	7,869	7,691	7,434
2001	135,014	5년	6,951	8,150	7,910	7,852	7,225
2000	119,982	6년	6,813	7,659	7,373	6,914
1999	118,014	7년	6,422	7,695	7,388
1998	116,727	8년	6,666	7,700
1997	91,159	9년	5,418
각년도 결혼코호트별 이혼건수 합계(B)	6,897		13,226	19,433	27,600	36,204	43,482	51,135	55,755	62,950	66,956	
이혼(B)/총혼인건수(A)	2.1%		4.2%	6.2%	9.1%	11.8%	13.6%	15.3%	15.4%	16.8%	17.2%	

* 자료: 통계청(각년도). "혼인과 이혼결과"를 기초로 재분석함

받는 조이혼율보다는 결혼코호트별로 결혼기간에 따른 이혼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실제보다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 우선 연구자들의 후속연구를 위해 10년 이상의 결혼기간을 급간으로 묶어서 제공하기 보다는 각 년도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논의에서 이혼율 예측에 중요한 요인으로 근대화 지표인 도시화율을 선정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시도별로 계산되지 않아 15세 이상의 농촌인구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도시화율도 제공되길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혼율의 지역적 차이가 다양함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다양한 통계청의 자료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구연창(198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고시계**, **10**, 87-111.
 구계군(2006). 이혼제도의 개선방안 - 최근 입법논의와 관련

하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30(1)**, 107-128.
 권영미(2000).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용(1997). 소위 친권행사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족법연구**, **11**, 253-279.
 김성희(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김숙자(1998). 판례에 나타난 이혼사례연구. **가족법연구**, **2**, 265-324.
 김숙자(2001). 한·중 이혼법의 비교연구 - 최근 개정된 중국 혼인법상의 이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7**, 121-143.
 김옥·이완정(2001).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예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31-40
 김철자(1998). 혼인의 파탄과 이혼청구. **가족법연구**, **12**, 247-282
 노명숙·김순옥(2000). 1990년 개정가족법 이후의 판례에 나타난 이혼효과: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93-112.
 박경애(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한국인구학**, **23(1)**, 5-29.
 박현주·한경혜(2006). 노부모의 지원과 이혼한 성인 자녀의 이혼 후 적응. **한국노년학**, **26(2)**, 361-380.
 박훈(2004). 이혼과 세법. **한국세법연구회 제10회 하계학술**

- 대회 발표논문집.
- 방혜신(2003).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27, 157-206.
- 방혜신(2005). 우리나라의 협의 이혼제도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9, 389-431.
- 배정 외(1998). 이혼의 세계화. **월간 말**, 7월, 133-135.
- 서지영(2002). 부모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한기(2003). 한국부부의 이혼: 경향과 대책. **사회과학논총**, 2, 39-52.
- 소천부지(김원태 역, 2000). 일본의 이혼문제. 제24회 아시아 가족법 3국회의 발표 자료집.
- 송다영(2004). 가족위기 지표에 대한 비판적 재 고찰: 이혼율과 출산율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5, 117-141.
- 신순자(1999). 신문기사에 나타난 새 가족법상 이혼 판례 분석 - 1996. 2. 12~1999. 1. 4,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대한가정학회지**, 37(6), 109-121.
- 오은순(1998). 이혼가정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 11(2), 62-73.
- 오은순(2001). 이혼가정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9(1), 19-45.
- 옥선화 · 최새은 · 권소영 · 강유진(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 옥선화 · 남영주 · 강은영(2006). 이혼자들의 이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23-235.
- 옥선화 · 권소영(2005).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3), 199-219.
- 유계숙 · 장보현 · 한지숙(2006). 이혼 전 · 후 가족상담 운영 모형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59-96.
- 유계숙 · 최성일(2005). 이혼 숙려 부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모형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57-92.
- 유재성(2004). 한국의 이혼율 감소를 위한 제안: 이혼숙려기간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7, 385-407.
- 유희정(2005). 부모의 이혼과 대학생의 이혼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17(3)**, 155-226.
- 유희정(2005).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3(6), 81-95.
- 이강이 · 최혜영(2005).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이혼 양상에 대한 분석(II) - 1940~1990년대 조선 ·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9), 129-141.
- 이무영 · 이소희(2003).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2), 39-61.
- 이정우(2003).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19(2), 63-95.
- 이정은 · 김진석(2004). 세계 2위의 이혼율, '놀라움' 그이상의 '힘겨움'. **월간 말**, 4, 166-171.
- 이정향(2003). 현행 이혼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사회학논총**, 8, 97-116.
- 이종한 · 이윤희(2000) 이혼제도와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5(2), 59-83.
-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화숙(1988). 자의 최대의 이익과 현행 친권제도. **가족법연구**, 2, 205-229.
- 이화숙(2005). 이혼원인으로서의 자녀의 이익. **연세대 법학연구소**, 15(3), 35-61.
- 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 47-53.
- 전영주 · 이성희(2006). 협의이혼 청구자의 원가족 경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91-203.
- 정기원(2004).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율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계열 자료의 분석, 1970-2002. **한국인구학**, 27(1), 57-80.
- 정현숙(2004). 이혼가족아동의 권리향상 방안. **한국아동권리학회**, 8, 251-274.
- 정현숙(2006). 혼인을 특성, 변화요인 분석과 가족정책 제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177-194.
- 조경미 · 주혜주(2003). 이혼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4), 543-551.
- 통계청(2007). 2006 이혼통계 결과.
- 표계학(1994). 스웨덴의 이혼 후 부양제도. **가정법연구**, 8, 345-368.
- 최민자(2002). 이혼가정이 늘고 있다 - 새로운 삶의 날개 달기 - 이혼, 그 후의 새 삶을 향하여. **기독교사상**, 5월, 103-114.
- 최상진 · 김은미 · 차영란(2006). 이혼 사유의 사회적 구성: 사회적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1(2), 227-24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의식조사**.
-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 한국여성개발원(1996).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 한국청소년상담원(2001). **이혼가정의 아이들**. 연구보고서.
- 한경혜 ·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3.
- 한경혜 · 손정연(2006). 결혼의 질, 이혼 장애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83-102.
- 한경희 · 김주현 · 강혜원(2004). 성인 남녀의 이혼 과정 각 단계

- 에서의 성별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93-118.
- 한복룡(2005). 파탄주의국가들과 한국의 이혼법. *안암법학회*, 20, 155-181.
- 한성현 · 최민자 · 이진석(2000). 우리나라 여성 이혼율의 최근 변화추세 - 인구동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1), 1-10.
- 허미화(2002).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 원인 및 이혼가정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문헌적 고찰. *유아교육논집*, 6(2), 183-205.
- 허미화(2004).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방안들에 관한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9(4), 339-356.
- Bramlett, M. D., & Mosher, W. D.(2002). Cohabitation,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Health for Statistics: Vital Health Statistics*, 23(22).
- Cherlin, A.(1983). Changing family and household: Contemporary lessons from historic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ety*, 9, 51-66.
- Clarke-Stewart, A., & Brentano, C.(2006). *Divorce: Causes and consequenc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llman, I. M., & Lohr, S. L.(1998). Dissol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laws and divorce rate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8(3), 341-359.
- Giddens, A.(2003).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7-22). Boston: Allyn & Bacon Pub.
- Glenn, N.(2001). Social science findings and the family wars. *Society*, 38(4), 13-22.
- Hays, S.(1996).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 Leslie, G.(1982).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rice, S. J., & McKenry, P. C.(1988). *Divorce*. Newbury Park: Sage.
- Simmon, C.(1998). *Readings of no-fault divorce*. California Research Bureau. California State Library, CRB-98-004.
- Skolnick, A.(1991). *Embattled paradise: The American family in an age of uncertainty*. N.Y.: Basic Books.
- Thonton, A.(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73-893.
- Waite, L. J., & Gallagher, M.(2000). *Case for marriage: Why married people are happier, healthier and better off financially*. Westminster, MD: Broadway Books.

□ 접수일 : 2007년 11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1월 25일